

4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과 중국

북장: 파싱은 중국과 일본

— 구상과 현실

이철호



■ (위) 2011년 ASEAN+3 정상회의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시아 지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의 표지



1. 머리말: '동아시아의 귀환'과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의 지역적 일체성을 찾는 데 영토국가들의 집합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된 것은 영토를 초월한 경제적 역동성 덕분이었다. 1990년대 초 동아시아 역내 경제교류가 급증하면서 유럽 통합과정의 가속화와 맞물려 아시아 내 지역화 논의가 촉발되었다. 경제세계화의 기반인 물류·통신비의 감소와 자본자유화는 영토국가의 규제력을 약화시켰고, 이와 동시에 세계정치경제 무대에 동아시아가 일체적 단위로 등장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 영토와 경제의 새로운 역학관계 속에서 동아시아의 지역성이 포착된 셈이다.

동아시아 지역화에는 두 가지 사건이 결정적이다. 하나는 1985년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고 현상이다. 이로부터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과 일본자본의 동아

* **지은이 | 이철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프랑스 사회과학대학원(E.H.E.S.S.) 중국센터에서 현대중국의 개혁개방을 중국사의 장기구조 속에서 조명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했으며, 북부 및 동북 중국의 지역주의와 국제협력력을 통해 본 동아시아 초국가주의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정치경제, 동아시아지역협력, 국제공간정치, 비교도시지역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동북아 지역질서의 복합화에 대한 고찰: 구조·행위자·시간축의 재현」(『세계지역연구논총』 28집 3호, 2010), 「탈주권거버넌스의 지역정치: 유럽 신지역주의와 월경지역협력시스템」(『21세기정치학회보』 20집 1호, 2010), "New Regionalism across the Korea-Japan Strai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Cross-Border Cooperation between Busan and Fukuoka in Light of the Scandinavian Øresund Region"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vol. 27, no. 2, 2009),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공간적 변용과 해양아시아: 대륙-해양의 역학에 대한 비판적 정학적 이해」(『동아연구』 53호, 2007) 등이 있으며, 공저로서 「창조도시 부산을 향한 성찰과 모색」(동북아지역발전연구원, 2010), 「국제정치경제와 새로운 영역」(법문사, 2008) 등이 있다.

시아 역내 이동이 가속화되었다. 비록 용도폐기 되었지만 ‘엔화경제권’이라는 용어는 ‘기리기 모형’으로 불린 일본식 산업화모델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화를 상징했다. 두번째 사건은 탈냉전과 맞물린 중국의 제2차 개혁개방이다. 1990년대 이래 국제노동분업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중국연해지역의 성장은 동아시아생산네트워크를 비롯한 역내 경제 상호의존을 심화시킴으로써 지역화를 촉진했다.

동아시아의 지역화는 지역공동체에 관한 담론을 낳고 이는 다시 제도 차원의 지역주의 논의로 발전했다. 약 한 세기 전,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구도 속에서 아시아연대론이 품었던 대안적 문명과 질서에 대한 희망은 탈냉전과 함께 ‘동아시아’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재생되었다.¹⁾ 이른바 ‘동아시아의 귀환’²⁾은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주의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1997년 일본의 아시아통화기금 제안에 이어 2000년 역내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가 결실을 보았다. 199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한·중·일 3국을 초청해 이루어진 ASEAN+3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세계화·지역화라는 구조변화의 동학이 작용한다. 냉전기 동안 국가체제(states-system) 위에서 조정되어 온 지구 차원의 세력균형은 탈냉전을 맞아 경제교류상의 다자주의적 가치와 국가들의 지역적 제휴 이익 사이에서 부단히 저울질된다. 동아시아에서 이 과정은 근대기 아시아연대론이 서구의 아시아 진출과 관련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외세력인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수사적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 후반의 엔화 절상과 연결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³⁾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전후로

1) 일본을 맹주로 한 아시아연대론은 쉰원의 ‘대아시아주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으로 이어졌다. 박승우,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과 오리엔탈리즘」, 『동아연구』 54집, 2008, 12~22쪽. 동양평화론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안중근의거 100주년기념 연구논문집 4』, 채륜, 2010. 일본에서 ‘복권’된 동아시아론은 양일모,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론: 아시아의 주체와 원리를 찾아서』, 『오늘의 동양사상』, 통권 15호, 2006. 한중일 근대지식인들의 아시아 인식에 대해서는 최원식·백영서,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창비, 2010 참조.

2)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비, 2000.

3) 盛田昭夫·石原慎太郎, 『「NO」と言える日本』, 東京: 光文社, 1989.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아시아’⁴⁾로 발전한다. 이렇게 점점 분명해지던 ‘동아시아의 귀환’이라는 국면은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와 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면에 압도되는 양상을 보인다.⁵⁾

이 국면 전환의 시기에 일본정부의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 구상이 등장했다. 2009년 자민당으로부터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당 내각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대미일변도 외교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웃국가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구상을 제시했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대등한 미일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민주당 외교정책을 이끄는 양대 수레바퀴로 부각되었다.⁶⁾ 일본 지역주의 외교의 공간범위였던 아시아·태평양이 동아시아로 좁혀지고 담론적 용어인 공동체가 정책용어로 사용되었다.⁷⁾ 그러나 하토야마의 이른 실각으로 민주당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동력을 상실한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중국의 부상’에 밀려 현실주의 외교 아래로 다시 숨어 버린 모양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중국의 부상과 연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귀환’과 ‘중국의 부상’은 일본 동아시아공동체론을 규율하는 조건이다. 원리로 보면 국민국가 건설이 근대국제정치의 핵심원칙이었듯이 지역 건설은 탈근대국제정치의 새로운 원칙이다. 글로벌 리스크의 심화 속에서 지역주의는 이제 과제가 되었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21세기 일본 외교의 변환을 표상한다. 이 구조 변환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귀환’은 ‘중국의 부상’을 맞아 과연 어떠한 지역성을 지향하게 될 것인가? 일본의 동아

4) マハティール, 石原慎太郎, 『No.1と言えるアジア: 対欧米への方策』, 東京: 光文社, 1995.

5) 중국위협론에 대한 반감이 집약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 출간된 것은 1996년이다. 宋強・張藏藏・喬邊, 『中國可以說不: 冷戰後時代的政治與情感抉擇』, 北京: 中華工商聯合出版社, 1996.

6) 조양현, 『일본 민주당 정부의 대외정책 및 한일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9; 김기석, 『동아시아의 새로운 공동체 구상』, 『일본공간』 7, 2010.

7) 한상일·이숙종 엮음,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EAI, 2011, 5쪽. 하토야마의 구상은 2002년 일본 자민당 내각의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가 제기한 ‘동아시아커뮤니티’(an East Asian community) 구상과 용어상 구별된다. 다니구치 마코토, 김종걸·김문정 옮김, 『동아시아공동체』, 울력, 2007, 51~52쪽; 장달중, 『중국의 부상과 중-일 간의 파워게임: 일본의 시각을 중심으로』, 『일본비평』, 창간호, 2009, 316쪽.

시아공동체론은 동아시아의 진화와 지역질서의 변환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최근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2011)은 일본의 지역주의 정책을 다양한 쟁점 영역을 망라해서 검토한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연구 역시 상당히 축적된 상태다.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동북아 역사재단, 2009)을 필두로 『동아시아공동체: 신화와 현실』(EAI, 2008) 등은 주요 쟁점 영역과 국가행위자를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동아시아지역주의의 정치경제를 다룬다. 이들 연구로부터 이 글이 힘입은 바 매우 크다. 그러나 그 접근법의 근간은 베스트팔렌식 ‘국제’정치이다. 이 글 역시 일본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정책적 내용과 국제정치를 검토하지만 그 배경인 ‘동아시아의 귀환’과 ‘중국의 부상’이 지닌 아시아적 특수성에 보다 더 주목한다. 달리 말해서 기존의 동아시아지역협력의 정치경제론에는 아시아적 프리즘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탈국제’(post-international) 정치로서의 동아시아지역주의가 ‘전국제’(pre-international) 정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간과되는 경향을 경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제3절)을 동아시아 시공간의 구조(제2절)와 장기지속(longue durée)의 패턴(제4절) 속에서 검토함으로써, 넓게는 동아시아지역주의의 특수성을 성찰하고 좁게는 일본 지역주의 정책의 이중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 지역구조와 지역공동체

1) 동아시아공동체 개념: 지역성과 복잡구조

지역관념의 준거로서 헤트네(Hettne)는 ‘지역성’(regionness) 개념을 제안하고 그 발전을 5단계로 나눈 바 있다.⁸⁾ 지역성은 영토성(territoriality)의 대응개념으로서 지역의 결합도와 지역통합의 발전 형태를 비교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지역성의 첫 단계는 자연 경계와 특수 환경을 지닌 지리 단위로서 지역공간(regional space)을 뜻한다. 두번째 단계는 서로 다른 곳의 인간집단 간

의 초보적 사회시스템인 지역복합체(regional complex)다. 19세기 유럽협조체제(European Concert)가 대표적이다. 세번째 단계는 지역사회(regional society)로서 ‘국제사회’가 지역 차원에서 형성된 것을 말한다. 네번째는 지역공동체(regional community)로서 지역이 분명한 정체성을 지닌 행위자로 변하는 단계다. 그 내용은 경제공동체를 비롯해 안보공동체, 정치공동체 등 다양하다. 마지막 단계는 지역국가(region-state)로서 기본적으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그리는 유럽연합의 이상이다.

지역성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는 두번째 단계인 지역복합체의 출현가능성이 커진 양상이다. 또한 현재 다차원적으로 진행 중인 지역화는 지역공동체의 전단계인 지역사회의 특징도 부분적으로 보인다. 즉 지역조직으로서 제도화가 이루어진 공식지역(formal region)과 사실상의 지역화가 진행되는 ‘현실지역’(real region)이 혼재되고,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이 관여하며, 통합을 지향하는 거시지역 속에 비국가행위자들의 초국가(transnational)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다양한 미시지역이 공존한다.⁹⁾ 이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화는 로즈노(J. Rosenau)가 말하는 국제(international)와 탈국제(post-international), 국가중심세계(state-centric world)와 다중심세계(multi-centric world)가 혼재된 복잡구조 속에서 전개되는 중이다.¹⁰⁾

지역주의의 발전에는 세계적 보편성과 함께 지역적 특수성도 작용한다. 동아시아공동체가 반드시 국가중심세계의 통합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공동체 형성은 다양한 경로를 밟으며, 결속력의 측면에서 공동체의 지향점은 다양하다.¹¹⁾ 또한 공동체를 향한 지역 프로젝트의 중심 분야는 물질, 상징, 제도로 압축되지만 실제

8) Björn Hettne, "Globalization and the new regionalism: the second great transformation," in B. Hettne, A. Inotai, and O. Sunkel eds.,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9) James Mittleman, "Rethinking the 'New Regionalism'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n B. Hettne, A. Inotai, and O. Sunkel eds.,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10) James N. Rosenau,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A Theory of Change and Continu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11) 최영중,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 최영중 외,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출판부, 2005, 57~62쪽.

과정은 더 다양한 분야와 주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다.¹²⁾ 동아시아공동체는 “시간을 두고 발전하는 정치적 구성물(political constructs)”¹³⁾로서 특정 상태라기보다는 진행형의 과정이다.¹⁴⁾

2)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여건: 동아시아 지역구조의 특수성¹⁵⁾

동아시아공동체론은 그 여건인 동아시아 지역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구조적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화에는 태생적으로 다중심 세계의 역동성이 중요하다. 냉전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지역성 형성은 경제와 사회, 도시로 압축되는 비국가행위자의 몫이다.¹⁶⁾ 사실 동아시아공동체론을 비롯해 동아시아의 국가중심세계에서 진행되는 다자주의 담론에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실천성이 약하다.¹⁷⁾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진행되는 많은 지역주의 프로젝트의 주역은 비국가행위자다.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라고도 불리는 아래로부터의 지역주의 움직임에서 동아시아는 정책에 기반을 둔 유럽과는 달리 자연발생적인 모습을 보인다.¹⁸⁾ 동아시아가 지역공동체로 나가는 데 필요한 신뢰라는 사회자본을 제공하는 것은 다중심세계의 지역화다.

둘째, 초지역적(trans-regional) 연계의 중요성이다. 초지역적 연계는 많은 국제레짐을 포괄하고 국가·국제 시스템들과 함께 지역시스템들을 다양하게 결합

12) Peter Schmitt-Egner, “The concept of ‘regio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notes on its reconstruction”, *European Integration*, vol. 24, no. 3, 2002.

13) Peter Katzenstein, “Asian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 11.

14)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가들에 있어 동아시아는 ‘방법’(다케우치 요시미)이자 ‘프로젝트’(아리프 딜릭)이며, ‘발견’(정문길 외)이자 ‘지적 실험’(백영서)으로 논의된다. 박승우,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리뷰』 1권 1호, 2011, 96~9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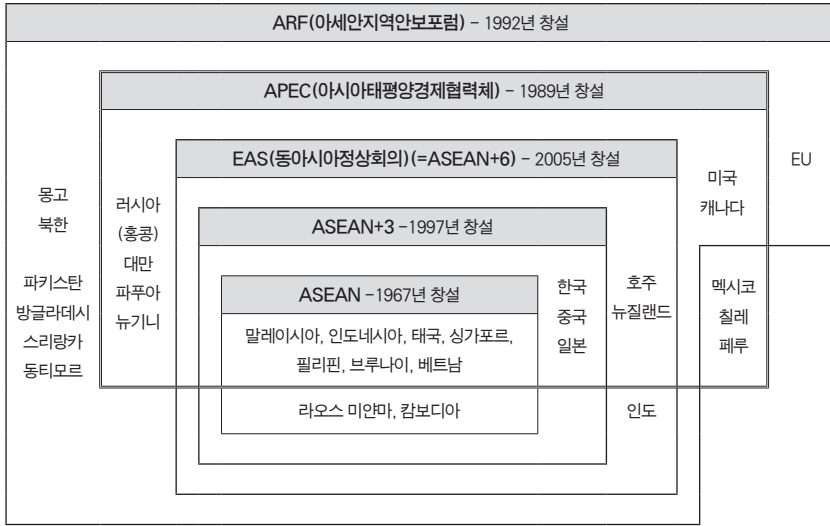
15) 이철호, 「동북아 지역질서의 복합화에 대한 고찰: 구조·행위자·시간축의 재현」, 『세계지역연구논총』, 28집 3호, 2010, 111~115쪽에서 발췌 보완.

16) Norman D. Palmer, *The New Regionalism in Asia and the Pacific*,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1991.

17) 동아시아의 다자주의 논의가 지닌 신화적 성격에 대해선,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후마니타스, 2007; 이옥연,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정치통합의 추동력」,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1호, 2008; 박사명,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습: 전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전장으로」, 이매진, 2006; Amitav Acharya, “A Concert of Asia?”, *Survival*, 41(3), 1999.

18) 이철호, 「국제관계의 공간적 변용과 지역 개념의 재고」, 『국제관계연구』 12집 2호, 2007, 99~104쪽.

〈그림 1〉 아시아 지역협력체



함으로써 이루어진다.¹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는 초지역적 연계를 체계화하려는 시도이다. 동아시아는 초지역적 연계성이 강하다는 점으로부터 지역주의의 개방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한편, ASEAN+3는 초지역적 연계라기보다는 동남아와 동북아라고 하는 동아시아 하위지역시스템 간의 협력이다.²⁰⁾ 이는 동아시아공동체의 공간적 외연이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를 포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²¹⁾ ASEAN+3라는 틀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동남중국과 동남아, 오키나와군도와 동남아의 역사지리를 성찰해 보면, 동아시아를 동북아에 가두는 것은 지나치게 한반도 중심적이다. 〈그림 1〉은 아시아의 지역협력체와 초

19) Donald Lampert, "Patterns of transnational relations", in Werner Feld and Gavin Boyd eds., *Comparative Regional System*, Oxford: Pergamon Press, 1979.

20) Hamashita Takeshi, "The Intra-regional System in East Asia in Modern Times" in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114~117.

21) 동아시아공동체의 성격은 평등과 공존이라는 내적 구조, 다양성과 관용의 다문화사회와 더불어 개방과 포용을 지향하는 외부로 열린 지역공동체로 규정한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의 공간적 외연은 동남아를 포함한 광역 동아시아를 상정한다. 박승우,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90~96쪽.

지역적 연계 상황을 보여 준다.

셋째, 미국이라는 역외세력의 존재로 압축되는 이른바 ‘침입시스템’(intrusive system)의 특수성이다. 통합지역주의(integrative regionalism)가 주권의 양도에 기초한다면, 침입지역주의(intrusive regionalism)는 역외세력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동남아의 지역성이 침입지역주의에 대한 대항 속에서 공고화되었다면 동북아의 양상은 반대로 전개된다.²²⁾ 냉전기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 미국의 침입방식은 달랐다. 유럽에서는 다자주의 원칙에 충실했지만 아시아에서는 양자주의를 선호했다. 여기에 진영 간 대립구도까지 가세해 동북아의 안보협력 구조는 양자주의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양상이다.²³⁾ 이러한 침입방식은 냉전의 해체과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유럽에서는 탈냉전이 소련·동구의 해체와 서방동맹체제의 강화로 진행된 결과 탈냉전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다자주의가 취약한 동북아에서는 오히려 역내 ‘분단체제’²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침입시스템은 “행위자 간의 편차와 단절, 계서와 비대칭성”²⁵⁾을 심화시킨다. 이는 매개와 중재, 수평협력과 균형이 필요한 지역주의 프로젝트의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3.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의 안과 밖

1) 일본의 외교정책 노선과 동아시아공동체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은 외교정책 노선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외교정책의 근간은 미일동맹을 토대로 ‘경무장, 경제우선’을 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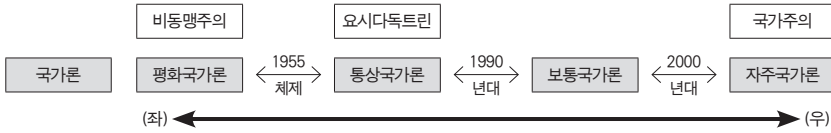
22) Amitav Acharya, “Regionalism and the emerged world order”, in Shaun Breslin, Christopher W. Hughes, Nicola Phillips and Ben Rosamond eds., *New Regionalism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London: Routledge, 2002.

23) Peter Katzenstein, *A World of Region: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pp. 50~60.

24) 이삼성,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 ‘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한국과 국제정치』 22권 4호, 2006.

25) 하영선, 「북한그물망국가」, 국제관계연구회 발표문, 2009.

〈표 1〉 일본의 외교정책 노선과 동아시아



안보관	균형론	요시다라인	동맹론	자주론
정책기조	미일동맹과 아시아외교의 균형	미일동맹과 아시아외교의 균형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역할 필요	헌법개정, 자주적인 일본 건설
대미관계	냉전기-비동맹/탈냉전-미일동맹유지	미일동맹유지 미국일방주의 견제	미일동맹강화 집단자위	대미 자주외교 독자방위론
아시아/지역주의	아시아중시론	탈냉전 후 아시아와의 관계 개선 우선	지역주의에 회의적 다자협력은 중시	지역주의에 회의적 (인종주의적)
대중관계	관여와 공조	관여와 공조	중국위협론 미국과 동반관계	중국봉쇄론
관련인사	민주당/오자와 와다 하루키, 강상중 후나바시, 다니구치,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 (이토, 다나카)	노니카 히로무, 고노 요헤이, 가토 고이치, 고가 마코토 (자민당 온건파)	오자와 (UN의 톨 강조), 고이즈미, 나카소네 (현실주의)	후지오카 (자유주의사관) 아베, 아소, 이시하라 '새로운역사교과서를 만드는모임'

자료: 박철희, 「일본 보수세력의 국가론과 동아시아 인식」, 박태호·박철희 엮음, 『동아시아의 로컬리즘 내셔널리즘 리저널리즘』, 인간사랑, 2007, 169~195쪽; 손열, 「일본의 21세기 동맹전략: 권력이동, 변환, 재균형」, EAI국가안보패널보고서 34, 2009, 6~12쪽; 이면우, 『현대 일본외교의 변동과 한일협력』, 한울, 2011, 213~216쪽.

로 한 요시다 독트린이다. 앞의 〈표 1〉은 요시다독트린을 기준으로 일본 외교노선의 흐름과 내용을 국가론으로 정리하고 있다.²⁶⁾ 요시다독트린이 상정하는 통상국가론은 1955년 이래 사회당과 진보세력의 평화국가론과 대립했다. 평화국가론은 아시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아시아중시론이다. 1990년대 신진당 총재 오자와(小沢一郎)는 '전후체제'에 대한 보수주의적 반성에서 보통국가론을 전개했다. 보통국가는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공헌국가이며 자국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국가를 뜻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보통국가론에서 파생한 자주국가론이 등장한다. 국가주의 전통의 자주국가는 헌법개정을 통해 모든 분야의 자

26) 안보,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중국의 부상을 보는 관점들을 네 가지 국가론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단순화의 위험을 수반한다. 아베 총리의 경우, 〈표 1〉에서 자주국가론자로 분류했지만 후술하듯이 그가 중시한 ASEAN+6정책을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단정하기란 무리다. 같은 맥락에서 보통국가론 내에서도 동아시아지역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주성을 회복한 ‘정치·군사대국’을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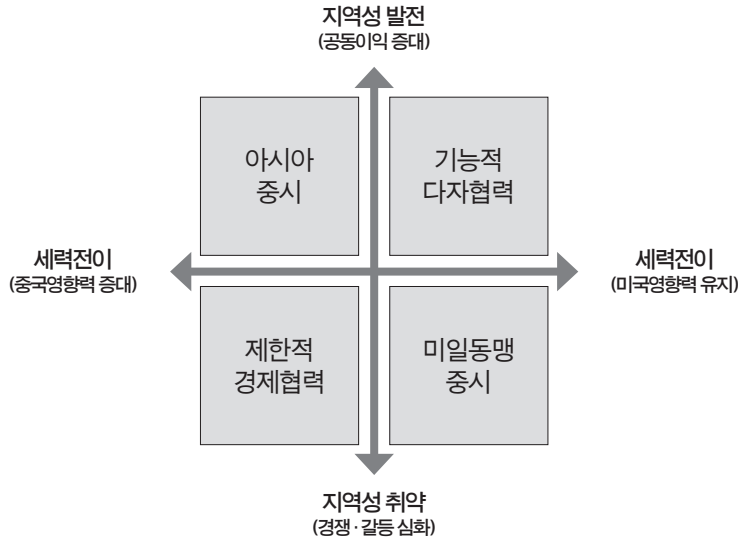
국가론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안보관의 차이에서 나온다. 미일동맹의 틀과 국제무대에서의 군사적 역할이 관건이다. 전통적으로 대미관계가 대아시아관계를 규율하고, 이는 대중관계와 직결되었다. 그러나 탈냉전과 함께 미일동맹과 아시아외교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민당 보수분류의 통상국가론은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의 평화국가론과 접점을 찾은 셈이다. 미국에 기대면서도 미국의 일방주의는 경계하는 양면성이 요시다라인을 따르는 자민당 온건파를 균형론으로 기울게 한다. 반면에 ‘보수’로 분류되는 보통국가론은 지역협력을 추구하되 미일동맹강화(동맹론)를 주장하며, ‘우익’으로 불리는 자주국가론자는 미일동맹의 불확실성을 염려하여 철저한 자주외교·자주국방(자주론)을 강조한다. 보통국가론에 있어 다자협력은 중국위협론에 맞서 미국과 함께 중국에 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시된다. 그러나 자주국가론에서는 본질상 지역주의 외교나 동아시아 공동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를 국가정책으로 내건 일은 동북아 3국을 비교할 때 사실 이례적이다. 통상국가론을 중심에 두고 좌의 평화국가론과 우의 보통국가론은 동아시아공동체를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간주한다. 이를 지역성의 발전과 미중간 세력전이를 변수로 해서 나누어 보면 <그림 2>과 같은 네 가지 시각이 도출된다.²⁷⁾

첫째, 하토야마 총리가 대표하는 아시아중시론은 동아시아공동체가 일본과 동아시아의 공동이익이 되며 중국의 부상을 현실로 받아들여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기능적 다자협력론은 동아시아공동체가 아젠다의 성격에 좌우된다는 입장이다. 동아시아가 공동이익의 장이 되고 있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셋째, 제한적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역내경쟁의 심화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관점이다. 중국의 부상이 지닌 양면성을 감안하여 경

27) 이하 진창수,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 전개,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세종연구소, 2011, 7~11쪽 참조.

〈그림 2〉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일본의 시각



출처: 진창수,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전개,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세종연구소, 2011, 10쪽 수정.

제이익은 공유하되 정치적 리스크는 줄이려는 입장으로서는,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공동체를 주장한다.²⁸⁾ 넷째, 미일동맹중시론은 미국영향력의 유지 속에서 지역 갈등이 심화된다는 관점이다. 중국의 부상을 가치체계가 다른 강대국의 출현으로 인식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성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일본 동아시아공동체론의 기반은 아시아중시론과 기능적다자협력론이다. 이 둘은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인식하며 대중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로부터 갈라진다.

2)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ASEAN+3 대 ASEAN+6

요시다독트린에 따른 대미일변도 외교에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와 냉전 상황이 겹쳐져 일본은 냉전기를 통해 아시아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 왔다.²⁹⁾ 비록 일

28) 大沼保昭, 『東亜の構想』, 東京: 筑摩書房, 2000. 진창수,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전개,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10쪽에서 재인용.

29) 모리 가즈코, 조진구 옮김, 『중일관계: 전후에서 신시대』, 리북, 2006, 32~41쪽.

본이 경제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화에 기여했지만 지역주의 정책을 추진할 구체적 동기는 없었다. 냉전기 내내 일본의 지역정책 기조는 아시아·태평양 협력 이었고, 무게중심은 호주를 통한 미국과의 연계에 있었다. 그 결실이 1989년에 창설된 APEC이었다.³⁰⁾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지역주의 정책은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구체화되었다. 1997년에 발의한 아시아통화기금 창설안은 구미국가들의 비판과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변국의 외환위기에 대비한 자금지원계획인 ‘신미야자와플랜’을 이듬해에 발표하고 또 한 해 뒤에 후속조치인 ‘오부치플랜’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주의의 발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은 ASEAN+3의 형성과정에서 보듯이 동아시아지역주의를 주도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리더십 발휘 의사는 동아시아지역주의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필요조건이었다.³¹⁾

ASEAN+3는 1999년 제3차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협력공동선언’(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을 채택한 이후 급속히 제도화된다.³²⁾ 특히 중국은 2000년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대 아세안 FTA 제안을 필두로 지역주의 정책을 강화한다. 중국은 ASEAN과의 협력을 강대국들의 중국 봉쇄압력을 막아

30) Terada Takashi, "Origins of Japan's APEC Policy", *The Pacific Review*, 11(33), 1998, pp. 338~346; 김기석,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한상일·이숙중 역음, 『일본과 동아시아』, 69~75쪽; 하라카와 히토시,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구상: 역사와 현재', 『한일의 동아시아지역구상과 중국관』, 제8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 논문집, 2009, 13~16쪽. 아시아와의 거리두기가 동남아시아와의 관계개선을 겨냥한 1970년대 중반 후쿠다(福田赳夫)독트린에 의해 다소 변경되었다면, 오히라(太平正芳) 총리의 '환태평양연대구상'은 1970년대 일본경제의 자신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양자관계 중심의 외교에서 탈피하여 다자협력으로 나아갈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면우, 『현대 일본외교의 변동과 한일협력』, 한울, 2011, 351~353쪽.

31) 김기석,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한상일·이숙중 역음, 『일본과 동아시아』, 80~82쪽.

32) 1999년 재무장관회의를 필두로 2009년 14개 분야로 확대된 각료급 회담을 비롯하여 2008년까지 19개 분야에서 정부차원(트랙 1)의 협력이 진행되며 전체적으로 54개의 관료 및 전문가 모임이 개최된다. 여기에 민간공동(트랙 1.5) 혹은 민간(트랙 2)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도 진행된다. ASEAN+3 협력사업은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제출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n Vision Group)과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East Asian Study Group)의 보고서에 입각해 진행되었다. 경제분야에 비해 사회문화 및 정치군사 협력은 상대적으로 더디다. 김기석,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83~89쪽.

줄 방패로 생각했다.³³⁾ 2001년 말 WTO가입을 앞두고 차별적 지역블록에 반대한 중국이고 보면 아세안에 대한 FTA 제안은 미국과 일본이 보기에 동아시아 통상외교의 판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양자간 FTA를 선호한 일본으로서는 더욱 충격이 컸다. 이 무렵 고이즈미 총리의 ‘동아시아커뮤니티’ 안이 나왔다.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포함시킨 동아시아커뮤니티 구상은 이후 수차례 재천명되지만 본질상 중국의 공세적 지역외교에 대한 균형잡기였고 미일동맹 강화정책에 종속된 사안이었다.

동아시아지역주의가 활성화되는 분위기에 힘입어 ASEAN+3는 장기 발전 과제로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지역금융협력메커니즘, 지역환율협력메커니즘과 함께 2010년경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n Summit) 설립을 계획했다.³⁴⁾ EAS는 ASEAN의 동북아3국 초청 형식을 지양하고 참여국들의 형평성을 담보해 진정한 동아시아공동체로 이행하기 위한 지역협력체다.³⁵⁾ 그런데 EAS는 중국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말레이시아 마하티르(Mahathir) 총리의 노력으로 계획보다 앞서 2005년에 창설된다.

처음에 EAS는 1990년 마하티르가 구상하고 미국과 일본의 견제로 좌절된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의 부활로 읽혔다. 중국은 EAS를 통해 동아시아 다자주의 협력을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³⁶⁾ 그러나 리스 미 국무장관은 방일 중 태평양커뮤니티(Pacific Community) 구상을 발표하고 미국을 배제한 EAS에 반대했다. 결국 중국 견제 전략에 따라 친미성향의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포함됨으로써 EAS는 ASEAN+3에서 확대된 ASEAN+6가

33) Zhang Yunling and Tang Shiping, "China's Regional Strategy", in David L. Shambaugh ed.,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p. 54.

34) East Asia Study Group, "Final Report of the East Asia Study Group"[<http://www.mofa.go.jp/region/asia-paci/asean/pmv0211/report.pdf>].

35) East Asia Vision Group,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and Progress"[<http://www.mofa.go.jp/region/asia-paci/report2001.pdf>].

36) Mohan Malik, "East Asian Summit",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0(2), 2006, p. 208.

되고 동아시아라는 지역 정체성에 흠집이 생겼다.³⁷⁾ 후술하듯이 미국은 오바마정부가 들어서면서 EAS 참가의지를 표명했다. 고이즈미를 이은 아베(安倍晋三) 총리는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을 ASEAN+6 체제로 재편해 나가는 한편,³⁸⁾ 이 '확대된 동아시아'(a broader Asia)에 이념적 색채를 입혔다. 즉 신입 3국을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보편가치를 일본과 공유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태평양과 인도양의 교류를 통해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기대한다는 말로 고이즈미보다 한층 더 분명하게 미국 중심의 대중국 포위를 암시했다.³⁹⁾ 일본은 자신을 동아시아 강국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의 강국으로 여겼다. 일본과 중국의 경쟁은 반대급부로 아세안의 결속과 입지를 강화시켰다.

2009년 하토야마 내각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주춤해진 지역공동체 논의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 핵심내용은 조부인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전 총리의 '우애'라는 철학에 기반하여 자민당의 대미의존 외교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외교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 외에 이 구상은 구체성을 결여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지역협력 정책들을 재정비하는 수준으로 정리되어 갔다.⁴⁰⁾

3) 동아시아공동체와 미·일·중 삼각관계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은 일본의 지역전략과 연동된다. 일본의 지역전략의 쟁점은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전환이다. 일본의 장기 불황과 극명히 대비되는 중국의 부상, 1980년대 IT·금융 부문의 신산업혁명을 통해 탈냉전과 함께 재부상한

37) 2008년 러드(Rudd) 호주 총리가 발의한 아태공동체(APC: Asia Pacific Community)의 경우에도 APEC 창설 당시의 일본배후설과 유사하게 미국배후설이 강하게 나왔다.

38) 경제산업성 장관 니카이 이니셔티브로 불린 동아시아포괄경제파트너십(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제창, 16개국의 지역통합 가능성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39) Abe Shinzo, "Confluence of the two seas," a speech addressed at the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22 August 2007,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pmv0708/speech_-2.html; Terada Takashi, "The Origins of ASEAN+6 and Japan's Initiatives: China's Rise and the Agent-Structure Analysis," *The Pacific Review* 23(1), 2010, p. 76; 김기석,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90~94쪽.

40) 김기석,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95~98 쪽.

미국, 그리고 이에 따른 세력지형의 변화가 기본구도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틀인 아세안에서 중국의 부상은 압도적이다. 높은 경제력과 낮은 정치력으로 묘사되던 일본이었지만 이제 경제력마저 중국에 밀리게 된 형세다. 중국의 '매력공세'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 역할과 대비된다.⁴¹⁾ 중국과 아세안은 2010년 FTA 시행으로 2010년 교역액은 전년대비 37.5% 증가하고 1991년 대비 37배 증가했다. 중국은 아세안의 최대무역파트너로, 아세안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로 부상했다.⁴²⁾ 중국위협론은 아세안에서 중국기회론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역시 역류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2002년 중국의 대일 수출은 1961년 이래 처음 미국의 대일 수출을 추월했다. 2004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누르고 일본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된다.⁴³⁾ 일본 대외경제의 무게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급속히 이동하는 중이다. 양국간 상호의존의 심화는 2002년부터 시작된 연례 '일·중 경제파트너십 협의', 지역협력기구(ASEAN+3, EAS 등)를 통한 '협조적 경쟁',⁴⁴⁾ '동중국해 등에 관한 일·중 협의'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만들었다. 그러나 협조적 경쟁에 대한 비판주의 근거 역시 강하다. 사실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비롯한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갈등 요인이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동아시아커뮤니티를 제창한 고이즈미 총리의 재임 시절인 2001~2006년에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적대감은 극에 달했다.⁴⁵⁾

41) 조영남, 「중국의 소프트파워와 외교적 함의」, 손열 엮음,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식마당, 2007; David Shambaugh, "China Engages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2004.

42) 중국국제방송 온라인서비스 <http://korean.cri.cn/1660/2011/11/17/1s177868.htm> ; <http://korean.cri.cn/1660/2011/11/16/1s177843.htm>(접속일: 2011. 11. 30).

43) 2009년 현재 일본은 중국의 세번째 무역파트너이고 두번째 외자유치국이다. 주중한국대사관, 「일일중국경제정보」, 2009년 8월 20일. 2010년 이후 일본은 아세안에 밀려 네번째 무역파트너가 된다.

44) 최청호, 「동아시아 지역주의 부상에 따른 중일 관계: 협조적 경쟁을 향하여」, 『21세기정치학회보』 17집 1호, 2007.

45) "고이즈미는 해마다 일본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 일본은 동아시아국가들 지원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쟁이 남긴 문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더구나 시장개방을 거부하고 다자간 협정도 꺼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웃 나라들로부터 상대적으 고립되어 갔다. 결국 일본의 이러한 외교정책은 중국이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데 일조했다." 마틴 자크, 안세민 옮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부키, 2010, 405~406쪽.

동아시아공동체외교는 공동체보다는 외교전략에 방점이 있다. 동아시아공동체외교는 지역협력체 창설과정에서 보듯이 봉쇄 대 관여, 균형 대 편승이라는 이중전략에 의존하는 현실주의의 연장에 불과하다.⁴⁶⁾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는 중국에 관여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는 조건부 관여로서 그 뒤에 위험회피(hedging)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미일동맹의 일체화, 미일호동맹 및 민주동맹 구축, ‘자유와 번영의 호(弧)’ 구축 등이 그 수단이다. 중국을 향한 동아시아공동체외교는 관여와 균형/봉쇄라는 양날의 칼의 한 면이다.”⁴⁷⁾

파일(K. Pyle)이 지적하듯이 20세기와 마찬가지로 미·일·중 삼각관계가 21세기 질서를 결정한다. 미국의 원칙은 한 국가의 아시아 지배를 막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세기 이래 미국은 중국과 일본을 시종 저울질했다. 제국주의 일본을 쓰러트린 미국은 공산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감싸안았고, 1970년대에는 소련을 견제하려고 중국까지 감싸안았다. 그런데 소련의 해체로 20년간 안정된 삼각관계를 뒷받침한 공통 목표가 소멸되었다. 게다가 일본의 국력쇠퇴와 대조적으로 1990년대 미국과 중국의 국력 부활로 인해 삼각관계는 다시 불안정해졌다. 이 불안정의 결과 일본외교의 양면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일본은 미일동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중관계의 자율성을 모색한다. 미국의 개입을 바라면서도 일방주의를 우려하고, 중국과의 경제이익을 중시하면서도 미국의 방기를 염려하는 양상이다.⁴⁸⁾

중국의 부상에 직면해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아시아 복귀를 일관되게 추진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의 핵심정책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추진하고, 정치안보 분야의 대중 견제를 위해 EAS 참가를 결정했다.⁴⁹⁾ 이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정책의 기본틀이 갖추어졌으며,

46) 이태환, 『동아시아공동체와 중국』, 손열, 『일본의 동아시아전략과 공동체론』, 하영선 역음, 『동아시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2008.

47) 손열, 『일본의 동아시아전략과 공동체론』, 183쪽.

48) 케네스 B. 파일, 이종삼 옮김, 『강대국 일본의 부활』, 한울, 2008, 514~515, 550~555쪽. 파일은 강대국들이 상호불신의 잠재적 근원을 침소봉대하는 바람에 중일관계가 복잡해진다고 본다.

새로운 형태의 참입지역주의가 전개될 태세다.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은 아시아중시론의 대척점에 있는 미일동맹중시론의 승리로 귀결되는 중이다. 2010년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미일갈등은 그 해 천안함사건으로 표출된 미중대립의 격화 속에서 봉합되었다. 경제적 다자주의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이익 역시 TPP로 옮겨갔다. 중국이 부상하는 만큼 일본은 미국으로 기울어지고 그만큼 일본의 지역관은 동아시아를 벗어나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셈이다.⁵⁰⁾

4.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과 동아시아 시공간의 진화

동아시아공동체는 원리상 세계화·지역화와 연동된 ‘탈국제정치’ 프로젝트인 만큼 동아시아 시공간의 진화 과정에 있어 거시적 변환의 측면을 지닌다. 주목할 것은 탈국제정치 현상이 반드시 전례 없는 일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장기지속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정치는 상당부분 전국제(pre-international)정치, 즉 전통 지역질서에 닿아 있다. 따라서 장기 패턴과 연관된 주요 키워드를 통해 동아시아공동체론이 지닌 보편과 특수, 지속과 단절의 문제를 검토하고 그 속에 일중관계를 배치시켜 봄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지닌 지역질서의 변환에 대한 함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 동아시아 정체성: 탈아·흥아와 화이질서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아시아외교를 규정해 온 ‘탈아입구’(脫亞入歐) 노선의 전환으로 평가되었다. 후쿠자와(福澤諭

49) 조양현,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과 미국: 미국의 EAS 및 TPP 참가를 중심으로」, 한상일·이숙종 엮음, 『일본과 동아시아』, 231~235쪽. TPP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TA of Asia-Pacific)의 전단계로 인식된다. 미국은 또 아세안 10개국과 ‘ASEAN+1’을 정례화했다.

50) 田中明彦, 「日本外交におけるアジア太平洋」, 渡辺昭夫 編, 『アジア太平洋と新しい地域主義の展開』, 東京: 千倉書房, 2011, 374~375쪽, 조양현,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과 미국: 미국의 EAS 및 TPP 참가를 중심으로」, 237쪽에서 재인용.

吉)는 메이지시대의 민족적 위기감에서 부국강병의 수단을 서구문명에서 찾고 아시아 인접국들을 이른바 ‘나쁜 친구’(惡友)로 규정했다.⁵¹⁾ 절교해야 할 나쁜 친구는 약 20년 후 오키쿠라 덴신(岡倉天心)의 ‘아시아일체론’에서 ‘흥기해야 할 아시아(興亞)’가 되나 이는 아시아 맹주가 되려는 일본의 명분으로 차용된다. “탈아와 흥아, 즉 일본이 아시아국가인지, 아시아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지의 문제는 일본의 근현대사상사에서 줄곧 하나만으로는 펼쳐지지 못하는 이중적 변주였다.”⁵²⁾ 국가주의가 강화되면서 아시아는 패권 추구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바뀌었다. 동양과 동아는 침략을 위한 개념이었다. ‘대동아공영권의 꿈’이 무산된 전후일본에 있어 동아시아는 ‘상실된’ 지역이었고, 역사적 유산의 청산 기회를 찾지 못한 채 미국의 동아시아관에 경도되었다.⁵³⁾ 탈냉전과 함께 다시 동아시아는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돌아왔다. 서양의 도래에 따른 메이지시대의 위기감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현재의 위기감이 만나는 곳의 지형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⁵⁴⁾

중국에 있어서도 동아시아라는 인식은 약하다.⁵⁵⁾ 화이질서에 있어 동아시아는 천하와 국가의 중간단계에 있는 여러 지리 공간의 하나일 뿐이며, 위계화된 중심-주변 구조에서 주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천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서보다는 중-서의 인식구도가 강해 중국이 포함된 동양이나 동아는 찾기 어렵다. 그래서 지역중심국가는 세계대국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⁵⁶⁾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어 20세기의 동아시아는 중일전쟁, 한국

51) 중국이 보기에 21세기 일본은 탈아입구의 연장인 ‘탈아입미’(脫亞入美)의 길을 걷고 있으며 아시아 정체성을 상실했다.

崔立如 主編,『東北亜地區安全政策及安全合作構想』,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北京:時事出版社,2006;龐中英,『論中日關係中的美國因素』,『國際經濟評論』2005年 第5/6期.

52) 쉰거, 류준필 외 옮김,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창비, 2003, 75쪽.

53) 子安宣邦,『昭和と日本「東亞」概念』,『環: 歴史・環境・文明』, 2001 봄호, 339~340쪽.

54) 1990년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 위기극복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메이지시대(1868~1912)의 아시아연대론이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쇼와(昭和: 1926~1989)의 1930년대 동아협동체론과 공통점이 있으나, 상황이나 추진방안, 지역구성원 사이의 공감대와 역학관계, 또는 정부나 민간 사이의 제도화 등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한상일, 『동아시아공동체의 역사적 재조명: 담론과 정책』, 한상일·이숙종 역음, 『일본과 동아시아』, 25쪽; 임성모, 『동아협동체론과 ‘신질서’의 입계』,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2005.

55) 백영서, 『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과 한계: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성찰』, 『시민과 세계』, 제10호, 2007, 104~107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2009, 40~48쪽.

56) 門洪華, 『論中國東亞地區戰略的展開』, 『中國的崛起与東亞國際秩序』(青島國際學術會議, 2008. 05. 30).

전쟁, 베트남전쟁으로 이어진 전장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시아는 '새로운 상상'의 대상이거나 '사유공간'이다.⁵⁷⁾ 따라서 중국을 동아시아로 감싸 안는 것은 일본이 동아시아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것만큼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성적으로는 팡중잉(龐中英)의 말대로 '주변'을 '지역'으로 상승시키고 다시 '지역과 중국을 융합'하는 새로운 길이 요구되지만⁵⁸⁾ 현실 중국은 옛 길을 다시 찾아가는 모양새다.

“양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시아의 일원’이 되려면 국가이익에서 ‘지역이익’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지역외교의 사고와 수단을 개발하고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과정이 상호신뢰를 촉진하고 나아가 ‘역사적 화해’로 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⁵⁹⁾

2) 제국질서와 역내 비대칭성

중국의 부상이 중국위협론과 쉽게 결합하는 이유는 그것이 동아시아의 특수성인 국가단위 간 ‘규모의 비대칭성’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⁶⁰⁾ 국가간 물리적 차이를 감안하면 동아시아지역주의가 EU와 같은 국가연합 방식을 지향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비대칭성은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베스트팔렌식 국가시스템(states-system)이라기보다는 본질상 “중국, 일본, 미국이 순차적으로 주도한 제국질서”⁶¹⁾라는 점과 맞닿아 있다.

고도성장으로 무장한 중국은 세계화로 인해 주권원칙이 퇴색한 국제공간에 어느새 ‘유연한 제국’으로 돌아왔다. 그 작동 기제는 제국 전통의 의례(한반도와

pp. 13~14; 예쯔청, 이우재 옮김, 『중국의 세계전략』, 21세기북스, 2005, 469~467쪽; 박병광,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인식, 내용, 전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16권 2호, 2010, 48~49쪽.

57) 왕후이, 이육연 외 옮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비, 2003; 쑨거, 류준필 외 옮김,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창비, 2003.

58) 龐中英, 『中國與亞洲—觀察·研究·評論』, 上海: 社會科學出版社, 2004. 모리 가즈코, 조진구 옮김, 『중일관계: 전후에서 신시대로』, 224쪽에서 재인용.

59) 모리 가즈코, 『중일관계: 전후에서 신시대로』, 224쪽.

60) Brantly Womack, *China Among Unequals: Asymmetric Foreign Relations in Asia*, Singapore: World Scientific, 2010.

61)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2005.

타이완에 대한 종주권)와 권력(군사력과 네트워크·문화력)의 조합이다. 중국의 부상은 한편으로 G2의 이미지를 통해 글로벌 위상을 갖게 된 제국중국과 다른 한편으로 일본열도에서 타이완을 거쳐 말라카해협과 인도양에 이르는 ‘봉쇄의 호’ 사이에 모양상 19세기식 게임판을 벌여 놓은 셈이다. 과거와 다른 점은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제국질서의 토대인 조공체계(tribute system)가 평화와 국제 상호이익의 측면에서 지닌 전략적 의의는 재음미할 가치가 있다.⁶²⁾ 전근대를 통해 중국과 주변국은 비대칭적 관계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관리했으며, 일본이 근대화하기 전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평화로웠다.⁶³⁾ 물론 비대칭성과 불평등은 보편적 정치현상이지만 시공간에 따라 규율의 코드는 달랐다. 근대 조약체계(treaty system)가 하드파워 기반의 권력정치를 원리로 삼았다면, 전근대 조공체계는 교역과 소프트파워에 토대를 둔 문화정치 내지 누폴리틱(Noopolitik)을 더 강조했다.⁶⁴⁾ 역사적으로 ‘팍스 시니카’(Pax Sinica)가 오래 지속되고 ‘팍스자포니카’(Pax Japonica)가 극히 짧게 지나간 것은 중국중심주의가 보편적 문명으로서 인식된 덕이다.

약 150년간 근대 조약체계를 겪으면서 동아시아는 이전과 분명 달라졌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지역공동체라는 새로운 공간을 축조한다면 그 공간질서의 콘텐츠는 과연 무엇일까? 피노키오의 진짜 고민은 거짓말 할 때 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꼭두각시에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국’이건 공영권이건 패권을 잡는 방법이 아니라 그 패권이 지향

62) Brantly Womack, *China Among Unequals: Asymmetric Foreign Relations in Asia*, pp. 144~146; 門洪華, 「論中國東亞地區戰略的展開」, 『中國的崛起與東亞國際秩序』, 青島國際學術會議(2008. 05. 30), pp. 18~19.

63) David C. Kang, *China Rising: Peace, Power, and Order in East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64) Hamashita Takeshi, "The Intra-regional System in East Asia in Modern Times", in Peter J. Katzenstein and Shira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pp. 118~128; 濱下武志, 『朝貢システムと近代東アジア』, 東京: 岩波書店, 1997; 조동일,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 지식산업사, 1999, 11~28, 32~35쪽; 권선홍, 『조선과 중국의 책봉·조공관계』, 권선홍 외, 『전통시대 중국의 대외관계』,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9, 21~22쪽; 정용화, 『주변에서 본 조공제도』,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2005.

할 ‘지역성’의 내용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고민을 해결해 줄 키워드는 소프트파워이다.

3) 대륙-해양의 동학과 탈국제의 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성 창출의 주요 기반인 경제 영역에서 보면, 제반 연계망(기업, 생산, 교류, 혁신) 확보는 사활적 이익이다. 동아시아의 초국가 연계가 주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양 전략의 변화는 불가피하고 이는 대륙-해양의 역학에 대한 지정학적 접근을 부각시킨다. 중국의 입장에서 만리장성으로 상징되는 육상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은 거의 해소되었다는 견해⁶⁵⁾를 받아들인다면, 일본의 걱정거리는 해양중국의 부상이다. 이미 헌팅턴(S. Huntington)은 미일동맹의 안보기능이 약화될 경우 일본은 중국에 복속된 봉신에 불과해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⁶⁶⁾ 그러나 안보 차원에서 미중관계는 과거 미소관계보다 훨씬 더 안정될 것이다.⁶⁷⁾ 그 근거는 냉전기 소련봉쇄에 필요했던 미 지상전력의 감축으로 여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중국해군력에 대한 미해군력의 우세가 담보된다는 점이다.⁶⁸⁾ 더구나 해양패권은 대륙패권보다 온화하며 전투보다 상업과 수송로 보호가 우선 과제다.

21세기의 대륙-해양 역학은 기능적 측면이 강조된다. ‘제국중국’과 ‘봉쇄의 호’가 만나는 시대는 역설적이지만 세계경제의 중심이 된 동아시아경제회랑이다. 동아시아의 해양은 육지의 막다른(seabound) 곳이 아니라 원심적 교류가 펼쳐지는(seagoing) 초국가공간이다. 냉전기 분단선이 지나던 완충지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초국경 경제벨트가 되었다. 그 주역은 초국가연계에 절치부심하는 대도시와 항만도시다. 애초에 동아시아의 지역성은 국가단위의 집합이

65) Robert D. Kaplan,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89(3), May/June 2010, pp. 22-41.

66)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the World Order*, London: The Free Press, 2002, pp. 236-238.

67) Robert Ross,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issue 4, Spring 1999, pp. 81-118.

68) Kaplan,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2010.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해양회랑(maritime corridor)에서 나왔으며 그 작동원리는 네트워크다. 뿐만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의 토대 역시 개혁개방과 연동된 '해양 중국의 부활'이다.⁶⁹⁾ 이 점에서 21세기의 동아시아는 대륙-해양의 이분법보다는 이를 넘나드는 도시들의 군도(archipelago)로 관찰하는 것이 적합하다.

실제 동북아지역질서의 탈국제화는 도시들이 펼치는 새로운 공간응집 속에서 잘 포착된다.⁷⁰⁾ 지난 20년간 분출한 경제적 역동성은 대도시권(nega-city region)의 부상으로 귀결되며, 동아시아경제회랑은 도시권의 원심력에 의해 새로운 초국가지역들로 분화되는 중이다. 황해권의 동아시아도시회의, 환동해도시회의, 한일해협권지방정부회의 등은 초국가주의의 새로운 주역이다. 도시들이 시도하는 합종연횡의 연결망을 통해 동북아 국제관계의 탈영토적 변환이 전개된다.⁷¹⁾ 그리고 이 변환은 영토패러다임이 도입되기 전에 보았던 동아시아정치경제의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바로 이 도시군도의 협조적 경쟁 속에서 실감으로서의 동아시아공동체를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5. 맺음말: 지역이라는 아포리아

21세기에 들어와 국가행위자의 메타포로 등장한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은 처음엔 중국의 ASEAN 지역외교에 대한 견제용으로, 후에는 집권민주당의 핵심 외교정책 구상으로 제시되었다. 어떤 경우건 동아시아공동체론은 한 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세계화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과

69) 이철호, 「동북아 국제질서와 동아시아지중해: 세계성과 지역성」(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2010; 이철호,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공간적 변용과 해양아시아: 대륙-해양의 역학에 대한 비판지정학적 이해」, 『동아연구』 53, 2007.

70) Allen J. Scott ed.,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Richard Florida, *New York: Basic Books*, 2008; Ohmae Kenichi, *The End of the Nation-State*,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71) 이무성, 「동북아통합과 유럽연합의 교훈: 다층적통치와 국가간도시네트워크 형성의 이론적 고찰」, 『유럽연구』 28권 3호, 2010; 양기호, 『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 논형, 2010, 311~340쪽; 이철호, 「해양아시아의 부활: 동북아 지방간 협력력과 항만도시 네트워크」, 『21세기 정치학회보』 16권 1호, 2006.

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중국의 부상에 압도된 결과, 평화와 번영에 관한 자유주의 프로젝트로서의 성격보다는 세력균형을 위한 현실주의 외교정책의 색채가 두드러진다. 중국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지역화 전략에 놀라 일본의 지역주의 외교는 전통적 공간 기반이었던 아시아·태평양으로 다시 물러선 모양새다. 일본의 입지는 ASEAN+3보다 더욱 확대된 동아시아, 즉 ASEAN+6를 통해 확보되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 역시 아시아에 다시 ‘참입’하게 되었지만, 전과 달리 EAS와 TPP라는 다자협의를 통해 들어왔다. 미국이 새롭게 추동하는 동아시아 참입지역주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정치적 견제와 동아시아의 귀환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의해 조율된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복귀로 압축되는 동아시아지역주의의 환경변화는 일본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이중성을 한층 더 부각시킨다.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사이에서, 미일동맹 강화와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염려 사이에서, 그리고 대중외교의 자율성 확보와 미국의 일본 방기(放棄) 예방 사이에서 일본은 부단히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도는 근대기를 통해 동아시아가 물려받은 지역 갈등 요인과 결합하여 통합의 동아시아보다는 분열의 동아시아를 강조하게 되겠지만, 어느 국가도 분열로부터 이익을 볼 수는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잠재적 갈등요인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저울질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지역공동체가 세계사의 메가 트렌드라면 지역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 지역의 몸매에 맞는 지역주의를 만드는 데 치중해야 한다. 지역성 제고를 위해 일본이 할 일은 많다. 무엇보다 마틴 자크의 말처럼 “일본은 근본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⁷²⁾

동아시아공동체론은 지역성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문명적 정체성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주의 문명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⁷³⁾라는 하이에크(F. Hayek)의 금언을 되새기면 중국의 지난 세기는 이 두 이념에 의해 희생된 셈이다. 근대중국의 고민은 한 세기를 돌고 돌아

72) 마틴 자크, 안세민 옮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부키, 2010, 402~411쪽.

73) Friedrich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 111.

결국 개혁개방을 답으로 선택했다. 이 ‘1978년 체제’는 현재 어떤 문명적 혁신을 만드는 중일까? 마찬가지로 문명의 도입에 있어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저울질해 온 일본은 이제 어떠한 대안을 그려 낼 것인가? 마부바니(Mahbubani)는 서구에서 수입된 현실주의나 자유주의보다는 아시아식 실용주의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발전의 촉매제를 찾는다.⁷⁴⁾ “유럽인들이 리스본조약을 협상하고 비준하는 데 수 천 시간을 쓴 것과는 달리, ASEAN+3은 1997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 한·중·일 정상들이 초대되면서 그냥 시작됐다. 그런데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등 커다란 성과를 낳았다.” 동아시아공동체의 전제조건인 지역정체성은 분명 ‘미래의 기획’이다.⁷⁵⁾ 미래의 기획이지만 속성상 ‘오래된 미래’⁷⁶⁾이며,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기획’(thinking forward, planing backward)이다. 시간의 퇴적 위에 만들어진 공간의 존재방식으로서 동아시아의 지역성을 찾는 작업에는 안내와 지속성이 필수적이다. 지역이라는 아포리아(aporia)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나 항상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탐구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의 지역건설은 민족주의 대립을 필두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있어 지정학적 분열 경향과 지경학적·지문화적 수렴 현상이 제로섬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탈냉전기, 경제·문명의 초국가적 상호작용에 따른 신지역질서의 태동이 관심사인 만큼 분열과 수렴의 상호작용에 대한 동태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주안점은 동아시아 지역정치의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이다. ‘지역주의’가 본질상 주권국가들의 상호교섭으로 이루어진 ‘국제관계’라는 틀에 대한 대안의 성격을 띤 것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둘러싼 국가중심세계와 다중심세계의 대화에 한층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중심세계가 동아시아공동체를 조타해 나가는 데 있어 초기에 시장의 역동성에 힘

74) Kishor Mahbubani. "Results Matter: Pragmatism Prevails in Asia", *Global Asia* 4(4), 2010.

75) 나종석·권용혁·이진원,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역음,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2009.

76)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양희승 옮김,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중앙북스, 2007.

입어 발동을 걸었다면 이제 항해를 지속하기 위해선 사회의 힘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사회의 활동은 국가행위자가 할 수 없는 초국가활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분 단선을 지우는 데 일조해 왔다. 시민사회의 지역화야말로 동아시아지역성의 내 생적 원천이며 동아시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 루쉰(魯迅)이 설파한 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된다.

대두하는 중국과 재일 중국인 커뮤니티의 변화 | 손안석

투고일자: 2011년 12월 8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12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본고는 북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정치, 경제, 혹은 군사분야가 아닌 화교와 유학생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중국의 경제발전이 동북아시아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거대함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중국의 대두는 재일 중국인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일까. 본고는 우선 일본 화교사회의 개략과 변화를 메이지시대의 나가사키, 다이쇼시대의 고베, 쇼와시대의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의 유학생 급등을 일본의 출입국관리국과 입관협회 등의 통계수치를 소재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 도쿄 이케부쿠로에 형성되기 시작한 중국인 커뮤니티의 개략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일본사회가 새로운 외국인 커뮤니티의 형성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입관협회가 편찬하고 있는 잡지 『국제인류』(国際人流)의 기사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1980년대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위상은 일본이라는 아시아의 우등생 모델을 넘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근대 이후 동일민족국가를 추구하는 일본사회에서 과연 중국, 혹은 외국인 커뮤니티라는 이민사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일본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동질성이 강한 사회에서 외국인 커뮤니티의 형성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의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한 것이다.

주제어: 재일 중국인, 신화교, 유학생 커뮤니티, 입관협회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과 중국: 구상과 현실 | 이철호

투고일자: 2011년 12월 7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1월 3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21세기 일본 외교의 변형을 표상한다. 이 글은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정책적 내용을 ‘동아시아의 귀환’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조건 속에서 검토하고 동아시아의 진화와 지역질서의 변환에 갖는 함의를 찾는다. 특히 지역주의의 프로젝트가 내포한 탈국제정치적 성격이 동아시아 전통국제질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을 동아시아 시공간의 구조와 장기지속의 패턴 속에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넓게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특수성을 성찰하고 좁게는 일본 지역주의 정책의 이중성을 규명한다.

주제어: 일본, 동아시아, 지역주의, 중국, 공동체, 아세안

Keywords : Overseas Chinese, International Chinese students, Immigration Bureau of Japan, Tokyo Ikebukuro, foreign community in Japan

Japan's Quest for East Asian Community and China:Idea and Reality

_ LEE Cheol Ho

Japan's quest for East Asian Community represents a metamorphosis of Japanese diplomacy in 21st century. This paper reviews political contents of Japanese regional community idea in the context of 'the return of East Asia' and 'the rise of China', and seeks to find its implications for the evolution of East Asia and the transformation of regional order.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post-international political features of the East Asian regionalism are deeply rooted in the traditional regional order, this article sends Japan's regional community policy back to the structure and longlasting patterns of East Asian time-space. In doing so, it reflects the particularity of East Asian regionalism and investigates the double face of Japanese regional policy.

Keywords : Japan, East Asia, regionalism, China, community, ASEAN

The Rise of the Chinese Economy and Sino-Japanese Economic Relations

_ KIM Kyu Pan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rise of the Chinese economy as one of the G-2 members in the 21st century, and further inspects the so called 'China Risk' and 'Chinese Threat to Japan' arguments in terms of economic perspective. First of all, it is confirmed that the Chinese economy may fall into the middle-income trap mainly due to their firms' low-level technology, low fertility rates, population aging, and wage push. However, it is shown that 'Chinese threat to Japan' in terms of economic perspective may not be as serious as it is expected. Recently, 'Chinese Threat to Japan' has been realized in a series of diplomatic episodes such as Japanese government's suspension of ODA commitments to China, and Japan-China conflicts over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in East China Sea. Notwithstanding these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Japan and China, there is no evidence that Chinese firms dominate Japanese domestic markets or the growing increase of Japanese firms' FDI into China cause deindustrialization of Japan.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Japan-China economic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as mutually complementary, rather than incompatible.